

사회변혁의 ‘대안’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의 의미와 가능성에 관한 고찰*

이 상 봉**

• 요 약 •

1990년대 후반 이후 NGO, NPO, 협동조합 등 이른바 어소시에이션이 분출하고 있다. 이는 공적영역을 대표하는 정부나 사적영역을 대표하는 기업 등과 같은 기존의 사회구성의 주축조직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하자 새로운 주체와 방식을 통해 이를 보완하거나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안’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에 주목하는 흐름은 그동안 사회변혁의 전망과 방식을 달리해온 우파와 좌파이론 모두에서 확인된다. 즉, 공적영역에서의 ‘국가의 실패’에 주목하는 논자들은 그동안 국가가 수행해 온 공적서비스의 결함을 메우고 위기에 빠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어소시에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적영역에서의 ‘시장의 실패’에 주목하는 논자들은 자본주의 시장메커니즘의 병폐를 치유하거나 종래의 사회주의를 대신하는 대안적 사회변혁이론으로서의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파악을 토대로, 이 글은 우파와 좌파이론 모두에서 주목받고 있는 어소시에이션에 관한 개념적·역사적·이론적 분석을 통해 사회변혁의 대안으로서의 그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불확실과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이의 분출이라는 동일한 사회현상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개념적·역사적·이론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해석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아가 하나의 대안적 이론체계 또는 이념으로서의 이른바 ‘어소시에이션주의’의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구할 것이다.

주제어 : 어소시에이션, 대안,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변혁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부교수

I. 서론

20세기 후반 이후 당면한 경제·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 협동조합 등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들이 분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기업 등 기존의 대표적 사회조직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하자 다른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대안’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존에 국가가 수행하던 공적서비스를 보완하거나 대신하고자 등장한 다양한 어소시에이션들은 공적영역에서의 ‘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좌파 사회변혁운동에서도 어소시에이션에 주목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알다시피,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가 가진 유효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좌파 사회운동은 대안적 구상의 결여에 따른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던 좌파 사회운동이 찾은 새로운 대안이 바로 어소시에이션이다. 즉, 몰락한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었으며 어소시에이션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어소시에이션 분출 현상을 위기와 그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는 근대적 사회질서의 제도적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측면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측면의 ‘자본주의’가 당면한 위기상황이 그 배경이 됨을 알 수 있다. 알다시피, 근대적 질서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엄격한 구분을 바탕으로, 공적영역의 담지자인 ‘국가’와 사적영역의 장(場)이자 작동 메커니즘인 ‘시장’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여기서 국가와 시장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며 근대적 질서의 중요한 두 축을 형성했지만 그 원리나 지향 가치 등에서는 대항적이기도 했다. 즉, ‘개인’과 ‘자유’를 강조하는 시장과 ‘공동체’와 ‘평등’에 무게를 두는 국가는 그 역할의 확대와 축소라는 방식으로 서로의 영역에 개입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적영역에서의 시장메커니즘이 가진 문제점, 즉 실업, 빈곤, 공황 등의 이른바 ‘시장의 실패’를 케인스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국가의 재정위기 등으로 복지국가정책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국가의 실패’로 간주한 시장의 반격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바가 있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가 국가의 개입을 불러오고 ‘국가의 실패’가 다시 시장을 소환하였지만, 시장과 국가는 서로의 대체물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되자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우파와 좌파 이론 모두에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거나 사회변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어소시에이션에 관한 개념적·역사적·이론적 분석을 통해 그 대안적 의

미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는 자발적 민간단체를 의미하는 폭넓은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안적 사회구성을 의미하는 엄격한 개념어로도 쓰이는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불확실과 혼동을 일으키기 쉽기에 이에 대한 개념적 정리가 우선 필요하다. 또한 어소시에이션의 분출이라는 동일한 사회현상을 목도하면서 이를 위기에 빠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의미로 포착하거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완 또는 재구성하는 계기로 해석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며, 특히 사회변혁운동 등에서는 이를 종래의 사회주의이론을 대신할 새로운 운동의 지향점이나 이념(ism)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념적·역사적·이론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논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고, 나아가 이것이 분출되는 사회현상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대안적 이론체계 또는 이념으로서의 이른바 어소시에이션주의(associationism)의 수립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II. 어소시에이션이란 무엇인가?

1. 어소시에이션의 개념과 특징

어소시에이션은 결사(結社), 즉 개인이 결합하여 만든 공동체나 사회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로 잘 알려진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의 결사에 해당하는 원어가 어소시에이션이며,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나 조직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에 현실에서는 어소시에이션으로 불리는 수많은 단체나 조직들이 존재한다. 즉, 어소시에이션은 개인들이 특정의 이해·관심에 기반 해 조직한 단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각종 직능·이익단체나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에 학계에서도 학문분야별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권리론에서는 결사, 인식론에서는 연합, 심리학에서는 연상, 생태학에서는 군집, 천문학에서는 연계집단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사회운동이나 사회학 등에서는 번역에 따른 헷갈림을 피하기 위해 자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원어발음을 그대로 쓰기도 한다.¹⁾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과 구분해 보자면, 흔히 결합을 나타내는 콤비네이션(combination)이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한 '수동

1) 田畑稔 外編, 『アソシエーション革命へ』, 社會評論社, 2003, p.23.

적’ 지배나 결합을 의미하는 반면 어소시에이션은 이와 대비되는 수평적이고 ‘능동적’인 연합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이는 흔히 공동체로 번역되는 커뮤니티(Community)와도 구별된다. 즉, 잘 알려진 토니스(F. Tönnies)의 저서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1887)가 영역으로는 Community and Association으로 번역되어 있듯이, 커뮤니티가 공동사회(Gemeinschaft)에 가깝다면 어소시에이션은 이익사회(Gesellschaft)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가 근대적인 새로운 ‘결사’를 나타내는 의미로 등장하여 19세기 이후 사회주의나 사회변혁운동 등에서 사용된 역사적 용법에 주목하면, 전통적 공동체는 물론 그 이후의 국가나 시장 등과 구별되는, 일종의 개념어로서의 어소시에이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어소시에이션은 근대 이전의 전통적 공동체와 명확히 구분되는 동시에 근대적 사회질서의 중요한 두 축을 담당했던 국가나 시장과도 대비되는 고유의 의미와 특징을 가진 결사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이는 개인성을 토대로 성립한 근대사회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결사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개인이 운명적·수동적으로 전체에 귀속되던 전통적 공동체와는 달리 제(諸)개인이 자발적·능동적으로 연합한 조직, 즉 개인성과 공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결사라는 ‘전체’와 그 구성원인 ‘개인’의 관계에 주목해서 보면, 제개인이 어소시에이트(associate)함으로써 형성되는 조직인 어소시에이션은 무언가의 목적이나 매개에 의해 ‘결합된’ 것이라는 수동형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이 주체적으로 ‘연합한’ 것이라는 능동적 의미를 가지며,²⁾ 개체가 전체에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의 주체성이 살아있는 전체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던 당시의 맥락에서는 어소시에이션이 권리를 가진 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 한 연합에 의해 성립하는,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공동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다바타(田畑稔)는 어소시에이션을 “제개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해, 힘이나 재화를 결합하는 형태로 사회를 만드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³⁾

어소시에이션의 이러한 특성은 루소(J. J. Rousseau)가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루소는 천부적 권리를 가진 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맺는 사회계약이 어소시에이션 계약이며, 이에 의해 성립하는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어소시에이션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국가’라

2) 大谷禎之介, 『マルクス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 桜井書店, 2011, p.170.

3) 田畑稔, 『マルクスとアソシエーション』, 新泉社, 2015, p.8.

는 정치공동체는 제개인이 자신들의 권리보장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연합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율적 결사라는 의미에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⁴⁾ 이처럼, 어소시에이션의 조직형태로서의 중요한 특징은 '자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때 말하는 자율성은 자발성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거나 이후에 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자율성이 담보되는 않는다. 자발성은 가입-탈퇴의 자유가 허용되는 수많은 직능·이익단체들도 대부분 갖추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곧 자율적 결사인 것은 아니다. 어소시에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성에 더하여 운영의 민주성, 즉 구성원 각자의 의지가 단체의 의지에 복속되지 않고 의사결정에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흔히 자발적 참가자는 자발적 퇴출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토론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퇴출해 버리기 쉽다. 이처럼 의견이 불일치하는 자들이 모두 퇴출해버리면 단체의 내부는 같은 의견을 가진 자들만이 남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자발적 단체가 곧 자율성을 담보한 어소시에이션인 것은 아니다.

2. 어소시에이션 분출의 배경

1990년대 이후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 사회적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조직들이 분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학자 살라먼(Lester M. Salamon)은 이러한 현상을 '글로벌한 어소시에이션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⁵⁾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단지 어소시에이션의 급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대혁명 이후 국민국가의 등장이 초래한 사회질서 변화에 비견될 정도로,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비롯한 기존의 사회질서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의 분출을 반영하여, 2000년대 이후 학계나 사회운동분야 등에서도 이론 및 사상적으로 어소시에이션(론)에 주목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왜 어소시에이션이 분출하게 되었을까? 워렌(M. E. Warren)은 그 배경으로 ① 글로벌화의 진전, ② 사회의 기능분화 및 다양화, ③ 집합적 행위실현시의 복잡성 증대와 리스크사회론에서 볼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결과의 발생, ④ 아이덴티티의 다원화에 의한 정체성정치 등의 등장 등의 사회변화를 들고 있다.⁶⁾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기존의 국가중심

4) J. J. Rousseau, "Du Contrast social", in *Oeuvres complètes de j. j. Rousseau* vol III, Gallimard, 1964, p.360.

5) Lester M. Salamon, "The Rise of the Nonprofit Sector," *Foreign Affairs*, vol. 74, No. 4, 1994, p.109.

의 정치이해나 운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대안을 모색한 것이 어소시에이션의 분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재정위기와 함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 대안으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어소시에이션이 대거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초 복지국가정책으로 불리는 국가의 개입이 시도되었던 계기가 시장원리가 낡은 실업, 빈곤,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의 개입은 이른바 ‘시장의 실패’라는 앞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개입 또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이번에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소시에이션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친 후에 등장한 제3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어소시에이션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구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다. 알다시피, 사회주의사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며 자본주의체제의 대항마 역할을 해 오던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비록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식은 사뭇 달랐지만,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주의의 대안이던 ‘사회주의의 실패’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좌파 사회변혁운동 전반이 이른바 ‘대안의 부재’에 따른 좌절과 침체를 겪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좌절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 즉, 소련의 붕괴와 함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대결구도가 종식됨으로써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정치적 다원주의나 분권적 사고가 분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동안의 좌절과 침체를 겪은 후, 좌파 사회변혁운동 내부에서는 붕괴한 구소련 사회주의체제가 과연 진정한 사회주의였는가? 라는 문제제기와 성찰이 이어졌고, 이는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일종의 ‘국가자본주의’에 불과했으며,⁷⁾ 기껏해야 ‘국가사회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들이 이어졌다.⁸⁾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소련 사회주의체제를 ‘국가자본주의’로 보든 아니면 ‘국가사회주의’로 보든, 공통점은 ‘국가’가 그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었고, 이는 사회주의사상이 지향하는 ‘공유’나 ‘공동성’ 수행의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으며, 마르크스가 말한 원점으로서의 사회주의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들을 토대로, 국가와 대비되는 특성을 가진 ‘어소시에이션’

6) Mark E. Warren,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5-8.

7) 大谷禎之介(2011), pp.287-289.

8) 소련사회주의를 ‘국가사회주의’로 보는 견해는 스탈린주의 체제를 ‘행정적=지령적 시스템’으로 규정한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소련경제학자의 대표적 견해이다. 小松善雄, “アソシエーション社會主義論の成立とその限界”, 『立教經濟學研究』 49-3, 1996, p.21.

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주체이자 방식으로 새롭게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소시에이션은 흔히 말하는 우파와 좌파의 이론 및 사회운동 모두에서 현실의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측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사회질서의 지향점은 다르지만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로서의 어소시에이션, 즉 기존의 공적영역의 '국가'나 사적영역의 '시장'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에 의미와 기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두 가지 대안적 의미

국가 및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와 시장이 근대적 사회제도의 중요한 두 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근대적 질서는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는 두 체도를 토대로 성립하였는바, 대의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공적영역에서는 국가 또는 정부가 공공성의 담지자로 등장하였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사적영역에서는 시장 또는 기업이 사적 이윤추구의 주체가 되었다. 즉, 국가와 시장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엄격한 분리와 함께 각기 서로 대비되는 두 영역의 주체이자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개체로서는 유약했던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해 모여 살면서 생존할 수 있었다. 인간이 모여 살다보면 공동체의 방어나 질서유지 등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를 공동의 활동을 통해 해결해 가면서 특정 장소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이에 기반 한 공동성, 즉 '장소적 공동성'을 가지게 된다.⁹⁾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모든 공동체는 구성원과 공동체 자체의 존속을 위해 일정한 공동성의 수행을 필요로 한다. 공동성은 필요의 산물이며, 어떤 공동체이든 나름의 공동성 수행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국가라는 근대적 공동체가 출현하면서 공동성의 수행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즉,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앞세워 공-사의 뚜렷한 구분 없이 공동활동을 통해 공동성을 수행했던 전통적 공동체와는 달리, 확장된 스케일의 추상적 공동체인 국민국가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엄격히 분리한 다음, 공적영역에서 공권력을 통해 공동성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었다.

알다시피, 근대혁명을 통해 성립한 국민국가는, 이전의 '가산제(家産制)' 국가와는 달리,

9) 이상봉, “도시와 공동성: 탈근대의 대안적 공동성에 대한 탐구”, 『인문사회연구』 Vol. 51, 호남대 인문사회연구소, 2016, p.8.

재산이 없는 ‘무산국가’였기에 공동성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했다. 즉, 개인의 주권을 토대로 삼아 이를 보장하기 위해 형성된 근대국가는 개개인 차원에서 처리하기 힘든 공통의 일들을 조세로 거둬들인 ‘공공재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국가적 공공성’이라는 근대적 공동성 수행방식의 출현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적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제력을 수반 한 공적영역, 즉 공공성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구분되어 성립하게 되는 논리로 스미스(A. Smith)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술이 많아질수록 술병이 단단해야 하는 것처럼 사적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영역이 필요하다는 논리이고, 또 하나는 개개인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큰 규모의 사업은 사회전체, 즉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이다.¹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엄격히 분리되면서, 개인은 사적영역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대신에 공적영역에서는 법이나 제도와 같은 시스템에 의한 개입과 제약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공적영역에서의 제약은 사적영역에서의 자유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멜(G. Simmel)은 “증가된 제약은 개인으로서는 훨씬 견딜 만했다. 왜냐하면 그 제약을 인정해 버리면 그만큼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¹⁾ 이로써 공적영역은 국가가 그 주체가 되어 공공성을 수행하는 영역이 되고, 사적영역은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된다. 공적영역의 국가와 사적영역의 시장이라는 두 가지 축이 성립하게 되며 양 축은 서로 대항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즉, 시장의 확대는 국가의 축소를 의미하며, 국가의 개입 증가는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후기근대에 접어들면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공히 위기를 맞고 있다. 즉,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성은 재정부족과 관료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이른바, ‘공공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시장시스템 또한 실업과 불평등심화 등의 병폐를 낳고 있는 것이다. 원리나 지향가치의 측면에서 국가와 시장은 서로 대치되는 측면이 있기에, 그 동안 ‘시장의 실패’에는 국가의 개입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실패’에는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처방을 내리기도 했지만, 각자가 서로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 때 양자 모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어소시에이션이라 할 수 있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적절한

10) Adam Smith, *Lectures on Jurisprudence*, ed. by R. L. Meek, D. D. Raphael and P. G. Stein, Oxford, 1978, pp.418-420.

11) Georg Simmel,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Translated, edited and introduced by Kurt H. Wolff. London: The Free Press, 1950, p.102.

대안의 모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소시에이션이 가진 대안으로서의 의미나 가능성은 국가의 위기와 시장의 위기라는 서로 중첩되면서도 구별되는 두 가지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때 더 분명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Ⅲ. '국가'의 대안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

1. 공공성의 위기와 어소시에이션의 대안적 특성

공적영역에서 국가가 공공성을 수행하는 대표적 두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제라 할 수 있다. 즉,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통해 공공성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관료제를 통해 적절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공공성이 후기근대에 접어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 즉, 공공성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참여의 부재'와 '대표의 불평등' 등에 따른 이른바 '비민주성'의 위기를 맞고 있고, 공적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관료제의 위계성과 경직성에 따른 이른바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스케일'과 '원리'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알다시피, 국민국가는 생활공동체의 스케일을 크게 넘어서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스케일로 형성되었다. 그러다보니 공동성의 수행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공동 활동이 아닌 추상적 시스템을 통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제도화한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모인 의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하는 대의민주주의였다. 즉, 국민주권의 실현에는 직접민주주의가 부합하지만 스케일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의제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가 채택된 것은 단지 스케일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그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근대성의 핵심을 이루는 이성주의, 즉 이성의 이름으로 타자를 계몽한다는 정치적 원리가 작동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대표를 선출할 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일단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정치는 대표인 전문정치인이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 즉, 정치란 계몽된 소수의 전문가가 다수의 국민을 '통치(government)'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를 자신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정치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여기게 되면 당연히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하게 되고, 이는 참여의 부재로 이어지며, 참여

의 부재는 민주적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거버넌스론, 지역정치론 등 지역스케일에 기반 한 직접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국민주권을 토대로 주권자인 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립한 국가는 조세·행정·국방 등의 광범한 분야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 나가면서 점차 집권화, 위계화, 비대화하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의 권한은 크게 확대되어, 이제 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당초의 역할을 넘어 관료제라는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관리하고자 했다. 광범한 스케일과 권한을 가진 국가가 이를 관리·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사회계약의 원리와는 달리 제개인이 국가 시스템의 통제·통치하에 놓이게 되면, 이제 제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을 조직하여 국가에 대항하는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람시(A. F. Gramsci)가 말한 바와 같이, 제개인이 ‘대항적’ 어소시에이션을 조직해, 대항해계모니를 구축하고, 나아가 진지전을 통해 사회개조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¹²⁾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후기근대에 들어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고 공적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되면서 정부에 의한 공적서비스 제공도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시스템에 근거한 일률적 집행만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었고, 관료조직이 가진 집권·위계적 특성과 경직적이고 비경쟁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가 가진 집권성과 위계성은 그 내부에 이와 원리적으로 충돌하는 ‘자율적’ 어소시에이션들이 형성되고 활동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집권·위계적 국가시스템 하에서는 그 내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도 위계화·이익집단화하기 쉽기 때문이다. 집권·위계화한 국가에 대한 대안으로는 분권론, 거버넌스론, 다원주의론 등 대항적 가치에 기반 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어소시에이션론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공공성의 담지자로서의 국가가 당면한 위기, 즉 대의민주주의의 비민주성과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안으로 어소시에이션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가와 대비되는 그 조직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어소시에이션은 스케일과 운영원리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장(場)인 국가와 명확히 대비된다. 생활권보다 크게 확장된 스케일을 가진

12) 田畑稔(2003), p.29.

국가는 이른바, 상상의 공동체로서, 대의제를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비해, 대부분의 어소시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적(local) 스케일, 즉 대면적 관계에 기반 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운영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동등한 참가에 기반 한 수평적 네트워크의 방식을 나타낸다. 국가가 국가적(national), 추상적, 집권적, 위계적 등의 조직적 특성을 가진다면 어소시에이션은 지역적(local), 대면적, 분권적, 수평적(네트워크) 조직이라는 대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어소시에이션은 외교·국방과 같은 중앙정치의 이슈보다는 육아·교육·돌봄 등 삶의 주기와 관련된 일상적 이슈들을 주된 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하다. 정치적 무관심에 따른 참여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소시에이션은 위로부터의 위계적인 '통치(government)'가 아니라 구성원의 자율성과 당사자성을 전제로 한 '협치(governance)'를 중요한 운영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심의(토의)민주주의'의 실천과도 연결된다.

어소시에이션이 비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한 관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근거 또한 그 조직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알다시피, 중앙집권적 관료시스템이 공적서비스 제공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회의 다원화와 함께 국민의 공적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역·계층별 등으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음에도 경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그러한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정책과 관련한 공적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아·교육·돌봄 등의 경우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시스템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일상적 삶과 관련된 공적서비스들은 제3자인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것보다 당사자성을 가진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민주성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소시에이션은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인 위탁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책임성, 즉 어느 정도의 공적 성격은 가지며, 이와 동시에 원래 사적영역인 시장의 경쟁구도 속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이므로 기업 못지않은 효율적인 일처리 또한 가능할 수 있다. 공적영역이 가진 책임성과 사적영역이 가진 효율성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적영역의 주체인 국가조직이 가진 특성이 기능원리로서는 위계, 기본가치로서는 평등이라고 한다면, 사적영역의 주체인 시장이 가진 특성은 기능원리로서는 경쟁, 기본가치로서는 자유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어소시에이션의 기능원리는 협동이며, 기본가치는 연대이다.

2. 허스트의 ‘어소시에이티브 데모크라시’론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론)은 기존의 ‘시민사회론’이나 ‘다원적 민주주의론’ 등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국가시스템에 의한 시민사회 통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재조직화로 대항하는 구도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론이나 대의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를 참여·심의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보완 또는 대체하려는 다원적 민주주의론 등은 공히 당면한 위기의 주된 원인을 국가조직이 가진 특성에서 찾은 다음 이와 대비되는 특성을 가진 어소시에이션에 주목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말한 그림시의 ‘대항적 어소시에이션’이나 하버마스(J. Habermas)의 ‘시민적 공공권’, 허스트(P. Hirst)의 ‘어소시에이티브 데모크라시’ 등은 그 대표적인 이론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허스트의 ‘어소시에이티브 데모크라시’는 어소시에이션이 가진 국가에 대한 대안적 의미를 잘 드러내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저서 *Associative Democracy*(1994)를 발표한 바 있는 허스트는 68혁명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다원화 흐름과 함께 등장한 이른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의 선구로 평가되는 학자이다. 그는 초기에는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인 알튀세(L. Althusser)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결별하고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에 근원적 비판을 가한다. 즉, 하부구조의 규정성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그는 상부구조인 국가기구에 주목하여 자신의 논지를 펼친다.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하고 의회를 통한 사회변혁을 모색하던 허스트를 비롯한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은 1970년대까지 국가의 개입, 즉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던 방식을 견지하며, 노동조합과 같은 경제조직과 정당 등 정치조직 간의 상호협조관계를 통해 사회문제를 조정·해결하고자 하는, 이른바 ‘코포라티즘(corporatism)’에 주목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복지정책이 위기를 맞게 되고, 사회의 다원화와 함께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기존의 노동운동 이외에 환경운동, 여성운동, 주민운동, 협동조합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이 분출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포섭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게 되자 기존의 코포라티즘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사회민주주의의 리뉴얼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 때 허스트가 주목한 것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분출하고 있던 어소시에이션이었다.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국가의 특성에서 비롯된 위기를 이에 대비되는 분권적이고 다원적인 특성을 가진 어소시에이션에 그 권한을 위양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의 어소시에이션론은 분권화와 다원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처방

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위협은 더 이상 내부의 계급투쟁이나 외부의 적성국가가 아니라 실업, 불평등,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허스트는 이러한 새로운 위기상황에 맞아 국가는 대의제 하의 집권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할 뿐 시민사회와 소통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처방은 집권적인 의사결정을 분권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도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이 참여케 하여, 그들의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협력을 통해 조정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허스트의 이론은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을 통해 정치를 다원화함으로써 대표와 참여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허스트가 '어소시에이티브 데모크라시'의 실천원리로서 ① 민주적 거버넌스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 ② 국가의 다원화와 연방화, ③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¹³⁾ 그의 이론의 핵심은 국가권력을 어소시에이션에 나눠줌으로써 분권·다원화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위양 받은 어소시에이션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 1997년 이른바 '제3의 길'이라는 정치노선을 앞세우며 집권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T. Blair)정권은, 허스트의 이론을 토대로, 중앙권력의 지역으로의 이양과 함께 국가기능의 일정 부분을 어소시에이션에 넘기는 분권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허스트는, 여기서 말하는 '제3의 길'이란 국가가 사회·경제적 조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주의'나 시장을 중심으로 이를 행하는 '시장주의'의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 조정을 행하고자 하는, 이른바 '어소시에이션주의(Associationism)'에 다름 아니라고 역설한다.¹⁴⁾ 어소시에이션이 단순히 사회·경제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부가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기존의 국가나 시장을 대신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이다.

이 글이 천착하고 있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의 관점에서 '어소시에이티브 데모크라시'론을 바라보면, 이는 기존에 국가가 독점하던 공적영역에서의 역할을 '공공화된 사적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에 위임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 즉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소통을 증진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영역의 어소시에이션이 가진 민주성과 효율성

13) Paul Hirst, *Associative Democracy: New Forms of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Polity Press, 1994, pp.20-35.

14) Hirst(1994), p.102.

을 공적영역에 수혈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민, 즉 시민사회를 공적서비스의 수급자로만 여긴 채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서비스의 확대에만 전념한 결과 국가권력의 집중화와 비대화를 자초해 온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공공성의 수급자만이 아니며 국가에 버금가는 중요한 공공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공공화를 통해 기존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허물어 이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허스트의 ‘어소시에이티브 데모크라시’론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시민적 공공권’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대안적 공공영역인 ‘시민적 공공권’을 시민사회의 생활세계에 뿌리 내린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하버마스 또한 어소시에이션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¹⁵⁾ 국가가 ‘관료제’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면, 시민사회는 ‘어소시에이션’들의 활동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허스트가 주장한 ‘어소시에이티브 데모크라시’의 실천이 정치를 다원화하여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새로운 대안적 민주주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어소시에이티브 데모크라시’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한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소시에이션의 내부적 운영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어소시에이션이 가진 자발성(가입·탈퇴의 자유)을 곧 민주주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소시에이션에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매개로 그 내부에 자문위원회나 감사위원회를 두는 등 민주적 운영이 도모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 뿐, 어떻게 어소시에이션 내부의 민주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있다. 자칫 어소시에이션의 운영이 위계적이 되거나 자율성을 잃고 국가의 하부조직화 되어버리면 대안적 민주주의로서의 의미는 상실되어 버린다. 즉, 어소시에이션이 가진 대안적 의미는 그것이 가진 자율적·민주적 조직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15) 山田政行, “政治的公共性と市民社會: ハーバーマスの公共性論の再検討”, 『早稲田政治公法研究』 38, 1992, p. 304.

Ⅵ. '시장'의 대안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

1. 사회주의와 어소시에이션

'시장'의 대안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에 관한 논의는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알다시피,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치열한 사적 이윤추구 경쟁이 빈곤, 실업, 불평등 등의 사회 문제를 양산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사회사상과 운동이 제기되었던 바, 그 대부분은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공동체적 원리를 통해 자본 중심의 시장원리를 보완하거나 그 대안을 지향하는 성격을 나타냈다. 당시 사회변혁을 구상하던 이론가들 사이에서 '어소시에이션'은 자본주의적 가치와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연대의 조직, 즉 '제(諧)개인의 결사'를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1847~8년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파리에 300개, 지방에 500개 정도의 노동자 어소시에이션이 조직되어 있었으며,¹⁶⁾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들 어소시에이션이 사회주의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자리했다. 가라타니(柄谷行人)가 사회주의운동도 어소시에이션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할 정도로,¹⁷⁾ 어소시에이션은 당시 사회변혁운동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했던 것이다.

푸리에(J. Fourier)나 프루동(P. Proudhon) 등 잘 알려진 초기사회주의 사상가들이 협동사회를 구상하면서 사용한 용어 역시 어소시에이션이었다. 이들이 구상한 협동사회는 '제개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연합한 결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푸리에에는 공동생활조직인 팔랑쥬(Phalanstère)를 통해 '제개인'이 생산물을 직접 교환하는 협동사회를 구상했으며, 프루동 또한 '제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협동의 일터를 매개로 삼아 생산물을 직접 교환하는 협동사회를 추구한 바 있다.¹⁸⁾ 협동조합의 창시자로 불리는 오언(R. Owen) 또한 그가 구상하던 사회주의를 어소시에이션으로 불렀다. 즉, 그는 1821년에 발표된 <레니크주에의 보고서>에서 자신이 제기한 노동자협동조합을 어소시에이션이라 칭하고 있다.¹⁹⁾ 비단 이들 초기 사회주의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을 통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자 하는 사고는 마셜(A. Marshall) 등 당시 주류파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널리 공유되어 있었다.

16) 田畑稔(2003), p.24.

17) 柄谷行人, “〈トランスクリティークスから〈帝国の構造へ〉”, 『現代思想』 2015年 1月 臨時増刊號, 2015, p.48.

18) 村上俊介 外編, 『市民社會とアソシエーション』, 社會評論社, 2004, p.284.

19) Robert Owen, *Report to the Country of Lanark: A New View of Society and Other Writings*, Everyman's Library, 1949, p.264.

마르크스-엔겔스 이론에 근거한,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운동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초기의 사회주의사상들은 공상적 사회주의로 치부되고 사회주의운동 내부에서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관심도 점차 시들해 졌다. 사회주의의 근간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을 통한 국가기구의 장악, 즉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한 국유계획경제의 실시로 보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실천전략과 어소시에이션의 이념 및 원리는 양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소시에이션은 협동조합운동과 같은 주류 사회주의운동과 결을 달리 하는 사회운동에 의해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현실적 실험이었던 소련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1990년대 이후 협동조합운동 등을 중심으로 어소시에이션이 다시 소환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총괄과 함께 재생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협동조합운동 등 어소시에이션에 기반 한 사회운동에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이유가,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사회적 생산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중심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실패에 있는 바, 이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국가자본주의이거나 기껏해야 국가사회주의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즉, 오오다니(大谷禎之介)는 소련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에 기반 한 계획경제의 일종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본질은 '국가통제형의 시장경제'였다고 보고 있다.²⁰⁾ 자본의 국유, 즉 국가자본은 다수의 국영기업이라는 형태를 띤 개별 자본들로 존재·기능하는 바, 이는 국유라는 허울 위에 한 줌의 당 관료에 의해 자본이 독점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생산수단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 또한 자본주의하의 임노동자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마르크스 이론의 재해석으로 이어진다. 즉, 레닌이 정당화하고 스탈린이 구축한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마르크스가 말한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며, 그가 말한 자본주의 이후에 도래하는 미래사회로서의 사회주의란 자본의 공동소유에 기반 한, 이른바 '어소시에이션 사회주의'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기술한 내용을 근거로 소련과 같은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한 국유계획경제를 사회주의로 여기게 되었지만, 소련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자들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그의 저술에서 새롭게 읽어낸다. 즉, 그가 말한 자본의 '사회적 소유'는 '국가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에 가까우며, 자본이 사회의 모든 성원에 속하는 공유의 재산으로 바뀐다고 해도 개인의 재산이 사회의 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바뀌는 것은 소유의 사회적 성격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 大谷禎之介(2011), p.287.

개인소유를 국가소유로 바꾸거나 주식회사를 국영기업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이 아니며, 자율적인 '체개인'의 연합인 어소시에이션에 의한 소유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이라는 것이다.²¹⁾

마르크스의 이론을 재해석하는 오오타니를 비롯한 다수의 논자들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극복한 이후의 사회를 '공산주의'라는 호칭과는 별도로 자주 '어소시에이션'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로 어소시에이션이 '근대적 개인'의 확립이자 새로운 '사회적 개인'의 생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²²⁾ 또한 이들은 마르크스 전체 텍스트의 재독해를 통해 마르크스가 그리는 미래사회란 단일한 중앙기구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일원적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어소시에이션들로 편성된 유기적인 조직이었다는 점을 밝혀낸다. 실패로 끝난 현실사회주의의 대안이자 앞으로의 사회운동을 이끌 새로운 하나의 이념, 즉 국가와 자본에 대한 저항을 통해 국가라는 통치양식과 자본제라는 생산양식을 동시에 변혁하려는 운동이자 이념인 이른바 '어소시에이션주의(Associationism)'를 제안하는 것이다.²³⁾

2. 어소시에이션과 시장의 재구성

알다시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주된 문제점을 생산관계에 있어서의 '잉여가치 착취'와 유통관계에서의 '생산의 부정부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사적소유를 바탕으로 이윤증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본가와 자본에 의해 고용되어 생산을 담당하는 임금노동자의 관계, 즉 자본-임노동의 관계를 생산과정의 특징으로 삼으며, 양자관계에서 자본이 우위에 있기에 '자본주의'라고 불린다. 여기서 자본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의 착취를 통해 이윤을 실현하는 바, 이윤추구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임노동자의 상황은 열악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자본에 의해 노동자들은 수동적으로 결합되며, 그들의 노동은 물화(物化)되어 이른바 노동의 소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의 이윤추구경쟁이 치열했던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빈곤, 실업 등의 문제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사상과 운동이 분출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어소시에이션 분출의 배경이 된 실업, 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에 수반 한 치열한 이윤추구경쟁의 결

21) 飯島廣·阿部文明·清野真一, 『アソシエーション革命宣言』, 社會評論社, 2010, p.17.

22) 飯島廣·阿部文明·清野真一(2010), p.195.

23) 村上俊介(2004), p.288.

과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자본주의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어소시에이션이 가진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알다시피, 자본주의는 곧 시장경제라고 할 정도로 자본주의와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시장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 시장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장(場)이자 메커니즘이라는 의미에서, 곧 자본주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 시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자본의 원리’에 따르며 시장은 사적이윤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는 공적영역의 국가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사적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어소시에이션은 ‘자본의 원리’에 대치되는 대안적 특징을 가진다. 먼저, 자본의 원리가 ‘사적소유’에 기반 한 사적이윤의 추구를 지향하는데 비해 어소시에이션은 ‘공동소유’에 기초하여 공동성, 즉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여기서 어소시에이션에 의한 공동소유란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의한 공유도 사회적 소유도 아닌 어소시에이트한 제개인의 소유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즉, 역사적 과정으로 본다면, 공동체의 공유에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거친 다음에 오는 진보된 형태인 공동소유인 것이다.

그리고 자본의 원리가 자본-임노동 관계에 기반 한 착취와 계급대립, 노동과 경영관리의 분리, 이윤추구를 위한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등을 그 특징으로 삼는데 비해 어소시에이션은 양극화와 비인간화를 낳은 대립과 경쟁을 지양하고 이를 대신해 ‘협동과 연대’라는 대안적 가치를 추구한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어소시에이션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공장은 이러한 대안적 특징을 잘 나타낸다. 즉, 이는 구성원인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노동과 경영관리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행함으로써 자본-임노동 관계에 기반 한 노-사 대립, 잉여가치의 착취, 비인간화 등을 낳는 무한경쟁을 지양하고자 한다. 자본-임노동, 자본가-노동자, 생산수단-노동력의 대립이 협동에 의해 지양되고, 경쟁을 연대로 대신하는 것이다.

이른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어소시에이션에 기반 한 처방은 개인적 자유, 사적이윤추구, 경쟁이 난무하는 시장에 공동성, 공동이익, 협동과 연대 등 이와 대치되는 요소를 강화해 시장을 보다 사회적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계보를 잇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에서 최근 들어 시장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연대)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처방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사회적 경제를 “영리를 우선시 않고 인간을 우선하는 경제체이며, 결사의 자유, 민주적 의사결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이익배분의 공익성이라는 성격을 가진 사업체에 의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⁴⁾

24) 藤田曉男, “非営利組織の活動と協働の論理形成”, 『季刊經濟理論』 49-3, 2012, p.7.

시장의 대안 또는 재구성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의 의미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1991년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하여, 사람들의 공통목적을 달성하는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라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²⁵⁾ 시장 속에서 기업들과 경쟁하며 경제활동을 행하는 사업체임과 동시에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조직, 즉 어소시에이션이기도 한 양면성을 가진 조직이다. 따라서 사업체로서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 영리기업과 다를 바가 없게 되며, 어소시에이션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면 사회운동단체와 구분하기 힘들게 된다. 실제로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 시기에 생활협동조합 등 대다수의 협동조합은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 사회운동조직으로서의 성격은 약화된 바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소시에이션의 성격을 강화한 새로운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현한 배경은, 앞서 살펴 본,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이 분출하게 된 배경과 거의 일치한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 장기실업자, 새로운 빈곤층 등 공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복지정책은 오히려 축소되는, 이른바 ‘공공성의 위기’가 그 배경이 된다. 당면한 사회문제에 공적인 국가나 사적인 기업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협동조합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공익(共益)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일반기업과는 다르지만, 이 역시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적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익(共益)이 아닌 사회적 공익(公益)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정(법률 381호/1991)> 제1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고 있다.²⁶⁾ 입법 과정에서 조합원의 공익(共益)이 아닌 지역사회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조합원 간 상호부조의 외연을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인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져 법안은 성립될 수 있었다.²⁷⁾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장으로

25) 원문은,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이다.

26) 동 법의 전문은 佐藤宏毅·伊藤由理子, 『イタリア社会協同組合B型をたずねて』, 同時代社, 2006, pp.101-105 참조.

그 동안 사적영역에서만 활동하던 협동조합이 공적영역의 국가를 대신하여 공적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본의 원리에 대항하며 시장에 대한 대안적 역할을 모색해 온 협동조합이 이제 국가가 독점하던 공적서비스 제공을 대신하며 국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어소시에이션에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론이 가라타니(柄谷行人)가 제기한 교환형태로서의 어소시에이션이다. 국가와 자본에 대한 대항운동인 NAM(New Associationist Movement)을 제창한 바 있는 그는, ‘생산양식’에 주목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교환(intercourse)양식’을 통해 세계사를 통사적으로 해석한다. 즉, ‘생산양식’론은 근대자본주의의 분석에는 적합하지만 그 이전과 이후의 사회를 통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가라타니는 교환양식을 역사적으로 출현한(할) 네 가지 형태, 즉 A.호수적 교환(부족), B.약취·재분배(국가), C.상품교환(자본), D.고차원의 호수적 교환(어소시에이션)로 구분한 다음, C(자본)가 강하면 신자유주의가 되고, B(국가)가 재분배를 강화하면 복지국가가 되며, A(부족)의 공동성이 강조되면 국가사회주의가 된다고 분석한다.²⁸⁾ 나아가 그는, 호수적 교환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계층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부와 권력이 집중되기 힘들었지만,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기애(이기심)’에 기반 한 B(국가)와 C(자본)에 의한 착취와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타인애(이타심)’에 기반 한 D(어소시에이션)에 의해 호수적 교환을 고차원적으로 회복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⁹⁾

이처럼 가라타니는 어소시에이션에 의한 교환은 상호부조적이지만 부족사회처럼 배타적이지 않고, 화폐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자본으로 전화하지 않는 교환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운동이 목표로 삼고 지향해야 할 미래의 교환양식이라고 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역사적으로 등장한 교환양식은 모두 복수적 교환형태로 구성된 이른바 ‘사회구성체’라는 점이다. 즉, 가라타니가 B(국가)와 C(자본)의 교환형태가 주도적인 현실의 자본주의 하에서 D(어소시에이션)의 교환형태를 ‘확장’해 가는 것을 사회운동의 목표로 삼으면서 지역통화운동 등을 어소시에이션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대안이란 B(국가)와 C(자본)의 교환형태를 폐기하고 D(어소시에이션)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D(어소시에이션)의 교환형태를 점차 확장하여 B(국가), C(자본), D(어소시

27) 알베르트·이어네스著, 佐藤紘毅 譯, 『イタリアの協同組合』, 綠風出版, 2014, p.213.

28) 柄谷行人, 『世界共和國へ: 資本=ネーション=國家を越えて』, 岩波新書, 2006, p.179.

29) 香川秀太, “未來の社會構造とアソシエーション, マルチチュード, 活動理論: 贈與から創造的交換へ”, 『實驗社會心理學研究』 58-2, 2019, p.177.

에이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형태로 시장을 재구성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에 대신하여: 어소시에이션의 대안적 가능성

대안은 위기의 진단과 연동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따라 그 처방으로서의 대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해서 보면, 당면한 실업, 빈곤,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 등의 문제들은 연이은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겪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시장'은 각각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대표하며, 이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근대적 사회질서의 중요한 두 축이었다. 그동안 시장의 실패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또 국가의 실패는 민영화로 대표되는 시장원리의 확대에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비되는 특성을 가진 두 영역은 모두 서로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시민사회영역의 어소시에이션에서 대안적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영역구분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공적영역의 국가와 사적영역의 시장 사이에 제3섹터인 시민사회영역의 어소시에이션을 두려는 것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려는 탈근대적·다원적 사고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사이에 있는 중간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동안 국가와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논리에 의해 포섭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근대성의 성찰에서 비롯된 탈근대적 사고의 확산, 사회의 다원화, 기술과 모빌리티의 발전에 따른 공간적 전환 등의 영향으로 영역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와 시장에 버금가는 사회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소시에이션의 대안적 가능성은 기존의 국가나 시장과 대비되는 조직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공적영역의 주체인 국가조직이 가진 특성이 기능원리로서는 '위계', 기본가치로서는 '평등'이고, 사적영역의 주체인 시장조직이 가진 특성은 기능원리로서는 '경쟁', 기본가치로서는 '자유'라고 한다면, 어소시에이션은 '협동'과 '연대'라는 대안적 기능원리와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소시에이션의 대안적 가능성은 그 조직적 특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즉, 국가나 시장이 가진 시스템의 논리에 포섭되거나 국가나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 위계화를 감수하면서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그 대안적 가능성을 잃게 된다. 협동조합은 전형적인 어소시에이션이라 할 수 있지만

규모나 사업이 확대되면서 효율성을 앞세운 결과 위계적 조직으로 변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즉, 규모가 작고 조직화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는 자율적 어소시에이션의 형태가 곧잘 유지될 수 있지만, 규모가 확대될 경우 조직화가 필요하게 되어 위계적이 되기 쉽다. 또한 NPO나 NGO의 경우에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의 경우 카리스마가 있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경쟁과 성과를 앞세워 어소시에이션이 가진 자율적 연대조직으로서의 특성을 훼손할 경우 그 대안적 가능성도 상실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소시에이션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안을 ‘A에서 B로’라는 식으로 뭔가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거나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어소시에이션의 대안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어소시에이션이 기존의 국가나 시장의 역할 및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의 의미를 기존의 질서나 제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소시에이션의 대안적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된다. 즉, 어소시에이션을 기존의 국가나 시장에 버금가는 사회구성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새롭게 자리매김함으로써 국가-시장의 이분법적 영역구분을 국가-어소시에이션-시장으로 다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대안을 전면적 대체나 전환만이 아닌 ‘재구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는 최근의 어소시에이션에 관한 논의들이 드러내는 이념적 괴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소시에이션에 주목하는 논의들은 상부구조인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보완하자는 이른바 보완론적 사고에서부터 하부구조인 시장질서의 전면적 변혁을 지향하는 변혁론적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 차이로 인해 다 같이 어소시에이션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지만 각각 별도의 논의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대안을 전면적 전환이나 대체가 아닌 재구성으로 인식하는 사고는 어소시에이션 논의를 둘러싼 이러한 분파성과 괴리를 극복하고 ‘어소시에이션주의’라는 하나의 이념적 지향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소시에이션의 대표적 형태 가운데 하나인 협동조합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운동과 달랐던 점은 대의민주주의와 시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이들이 추구하는 대안이란 기존의 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포함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서동주, “일본의 현대사상은 자본주의 이후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가라타니 고진의 새로운 어소시에이션 운동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23, 2022, pp.283-313.
- 이동연, “문화적 어소시에이션과 생산자”, 『문화과학』 73, 2013, pp.27-66.
- 이득재, “마르크스와 어소시에이션”, 『마르크스주의 연구』, 15-4, 2018, pp.76-104.
- _____,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혁명”, 『문화과학』 60, 2009.
- 이상봉, “도시와 공동성: 탈근대의 대안적 공동성에 대한 탐구”, 『인문사회연구』 Vol. 51, 호남대 인문사회연구소, 2016, pp.5-27.
- 이정은, “칸트화된 마르크스, 마르크스화된 칸트-K. Kojin의 어소시에이션을 둘러싼 비판적 독해-”, 『시대와 철학』, 27-3, 2016, pp.241-291.
- 정성진,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 연구의 혁신: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16-2, 2019, pp.111-142.
- 大谷禎之介, 『マルクス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 桜井書店, 2011.
- 藤田曉男, “非営利組織の活動と協働の論理形成” 『季刊經濟理論』 49-3, 2012, pp.6-13.
- 飯島廣·阿部文明·清野真一, 『アソシエーション革命宣言』, 社會評論社, 2010.
- 柄谷行人, “〈トランスクリティーク〉から〈帝国の構造へ〉”, 『現代思想』 2015年 1月 臨時増刊號, 2015.
- 柄谷行人, 『世界共和國へ:資本=ネーション=國家を越えて』, 岩波新書, 2006.
- 福地潮人, “社會ガバナンスにおけるアソシエーション: 社會運動體としての機能に着目して”, 『研究紀要』 18, 2017, pp.1-10.
- 山田政行, “政治的公共性と市民社會: ハバーマスの公共性論の再検討” 『早稲田政治公法研究』 38, 1992, pp. 289-323.
- 小松善雄, “アソシエーション社會主義論の成立とその限界”, 『立教經濟學研究』 49-3, 1996, pp.19-43.
- 田畑稔 外編, 『アソシエーション革命へ』, 社會評論社, 2003..
- 早川誠, “結社と民主主義: アソシエーションから政治は生まれるのか” 『年報政治學』 59-1, 2008, pp.61-81.
- 佐藤宏毅·伊藤由理子, 『イタリア社會協同組合B型をたずねて』, 同時代社, 2006.
- 村上俊介 外編, 『市民社會とアソシエーション』, 社會評論社, 2004.
- 香川秀太, “未來の社會構造とアソシエーション, マルチイチュード, 活動理論: 贈與から創造的交換へ”, 『實驗社會心理學研究』 58-2, 2019, pp.171-187.
- 形野清貴, 現代アソシエーション論に関する一試論 『阪經法論』 60, 2004, pp.41-89.
- アルベルト・イアーネス著, 佐藤紘毅譯, 『イタリアの協同組合』, 緑風出版, 2014.
- Hirst, Paul, *Associative Democracy: New Forms of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Polity Press, 1994.
- Owen, Robert, *Report to the Country of Lanark: A New View of Society and Other Writings*, Everyman's Library, 1949.
- Rousseau, J. J. “Du Contrast social”, in *Oeuvres complètes de j. j. Rousseau* vol III, Gallimard, 1964.
- Salamon, Lester M. “The Rise of the Nonprofit Sector,” *Foreign Affairs*, vol. 74, No. 4, 1994.
- Simmel, Georg,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Translated, edited and introduced by Kurt H. Wolff. London: The Free Press, 1950.

大韓政治學會報(第32輯 4號)

Smith, Adam *Lectures on Jurisprudence*, ed. by R. L. Meek, D. D. Raphael and P. G. Stein,
Oxford, 1978.

Warren, Mark E.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Abstract 】

**A Study on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Association
as an Alternative of Social Change**

Lee, Sang-Bong

Since the late 1990s, the social phenomenon of so-called associations such as NGOs, NPOs, and cooperatives has been erupting. This has the aspect of an 'alternative' in that it seeks to replace the existing public and private sector entities representing the social structure, such as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with new entities and methods to solve social problems that they cannot solve. The trend of focusing on associations as an alternative can be seen in both right-wing and left-wing theories, which have had different perspectives and methods for social change. That is, scholars who focus on the 'failure of the state' in the public sphere are interested in associations in the sense of supplementing the public services that the state has been performing so far or seeking an alternative to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is in crisis, while scholars who focus on the 'failure of the market' in the private sphere are interested in its possibility as an alternative theory of social change that can cure the ills of the capitalist market mechanism or replace collapsed socialism. Based on thi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alternative meaning and possibility of association through conceptual, histor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which is being noted by both right-wing and left-wing theories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urrent social crisis. The term 'association' is used in a variety of ways, which can easily lead to uncertainty and confusion. Even though we are witnessing the same social phenomenon of the eruption of associations,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how to interpret it. Therefore, through a histor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of association,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further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ssociationism' as an alternative theoretical system or ideology.

Key Words : Association, Alternative, failure of the State, failure of the Market, Social change